경기도 복지발전소 경기복지재단

vol.83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발행인(대표이사 직무대행 이사 배수용)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3층 | 031-267-9368 |http://ggwf.gg.go.kr | 2016.12.22.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사랑의 온도탑 39.1도, 기부에 한파가 분다

01 주요 내용

-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21일 현재 39.1도로 목표액 3,588억 원 중 1,401억 원에 그치고 있음
  - 지난해 같은 시기에 47.3도(목표액 3,430억 중 1,621억)와 비교하면 한참 밑도는 수준
  - 지난 '99년 나눔 캠페인 시작 이래 목표액 달성에 실패한 것은 2000년(IMF 외환위기 여파)과 2010년(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두 차례 뿐임
-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액도 16일 기준 목표치의 20.6%(15억 6,000만원)에 불과하며, 연탄 기부도 평년대비 35% 수준으로 위축
- 나눔과 기부 문화는 자원봉사와 함께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 시민들의 자발적 행위를 통한 자원봉사와 계층 간 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나눔과 기부 문화를 통해 한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 가능
-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율은 경제성장률과 국민들의 체감소득인 '경제적 여유'와 관련이 높음**
  - 기부참여율이 가장 높은 2011년의 경우 전년도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부참여율이 감소되는 2013, 2015년의 경우 전년도 경제성장률이 감소 추세
  - 주관적 소득수준도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부참여율이 가장 높은 2011년에 경제적 여유에 대해 '매우여유' 또는 '약간여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19.7%였으나, 2015년에는 8.3%로 감소
- 그럼에도 최근 수년 간 경제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유독 기부참여가 낮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패방지법'과 '국정농단 사태' 등의 사회적 영향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진단
  - 부패방지법 시행으로 자선단체 대한 기부행위가 자칫 법 저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몸을 사리는 기업과 개인이 늘어난 데다,
  -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정치 · 사회적으로 일종의 패배감이 생겨나면서 위축된 국민적 분위기가 기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 말 진행하는 집중모금 캠페인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나눔실태 2015」

***경제성장률이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는 n-1년

02 경기도 시사점

-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기부 참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자원으로서 복지의 양적 증대와 서비스 질 향상에도 매우 중요
-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기부금 등 민간영역을 통한 재원 확보가 관건임
  - 개인과 기업의 기부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장사업 홍보 강화, 기부의 가치와 명분 강조, 기부장벽을 낮추는 사회 · 경제적 유인체계 마련 등이 필요

2. 2016 가계금융 · 복지 조사결과 발표

01 주요 내용

-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의 소득은 전년대비 2.4%, 부채는 6.4% 증가하였고, 빈곤율은 전년대비 0.3%p 완화*
  - 가계금융 · 복지 조사는 가구의 재무건전성 및 경제적 복지의 수준 및 연도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매년 실시 중임
  - 조사결과 가계금융 부문에서 부채의 증가율이 소득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율(중위50% 기준)은 지난해(16.3%)에 비해 소폭완화

*소득: '15년 기준, 부채: '16년 3월말 기준, 빈곤율: 중위소득 50% 기준

〈표〉 2016 전국 가계금융 · 복지 현황

자산		부채		소득		빈곤율 (%)	소득5분위 배율
평균	증감	평균	증감	평균	증감		
3억6,187만원	4.3%	6,655만원	6.4%	4,883만원	2.4%	16.0	35.4

- **(가계금융)** 2015년 한 해 동안 가구는 평균 4,883만원을 벌었으며, 이중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4,022만원으로 조사
  -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 3,199만원(65.5%) · 사업소득 1,122만원(23.0%) · 공적이전소득 274만원(5.6%) · 재산소득 220만원(4.5%) · 사적이전소득 67만원(1.4%)으로 구성
  - 지난 '14년에 비해 근로소득(98만원), 공적이전소득(34만원), 재산소득(29만원)은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20만원 감소하고 사적이전소득은 그대로 유지

**사회보험료, 세금, 이자비용 등

- 가구당 평균 자산액은 3억 6,187만원, 부채액은 6,655만원이며, 지난해에 비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악화
  -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보다 5.5%p 증가한 116.5%,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6%p 증가한 26.6%로 조사
  - 가구주 특성별로 연령대 '50대',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인 가구의 자산과 부채가 가장 많음
- **(복지)** 통계청은 2015년 기준 빈곤율은 16.0%로 지난해보다 0.3%p 감소했으며, 지니계수(0.341)와 소득5분위배율(6.43배) 모두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보도***
  - 지니계수가 전년도보다 0.003p 감소하고 소득 5분위 배율도 0.1배p가 낮아졌으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이 각각 0.001p, 0.32배p씩 증가
  - 개인 특성별로 연령층 '은퇴연령층(66세 이상)', 종사상 지위 '임시 · 일용근로자'의 빈곤율이 각각 46.9%,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 노후생활 부문에서 가구주의 예상 은퇴연령은 66.9세, 실제 은퇴연령은 61.9세로 조사
  - 노후의 월평균 최소생활비는 183만원, 적정생활비는 264만원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노후대비가 '잘 된' 가구는 8.8%에 불과

02 경기도 시사점

-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구의 연소득은 5,205만원, 평균 보유자산은 3억 9,260만원, 보유부채는 8,046만원으로 전국평균에 비해 高소득, 高자산, 高부채 지역임
  - 시도별로 경기도 소득은 전국 다섯 번째(서울,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순), 자산은 네 번째(서울, 대구, 울산, 경기 순)이며, 부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음(서울, 경기 순)
- 전년과 비교했을 때 소득은 연간 117만원 증가한 것에 비해 부채가 연간 411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구부채액의 높은 상승폭에 대한 위험요소 관리가 필요(상환능력과 비교)

02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지역별 기부참여 현황 비교

지역별 기부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나눔실태 2015」과 '2016 경기도민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국 17개 시도 및 경기도 31개 시군 기부 참여율을 비교

- 2015년 기부 참여율을 보면 전남이 34.4%로 가장 높고 전북이 24.2%로 가장 낮음. 경기도의 경우 기부 참여율 27.7%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머무름*
  - 2011,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시도별 기부 참여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역별 격차가 '13년에 비해 좁혀지고 있음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각 년도)를 토대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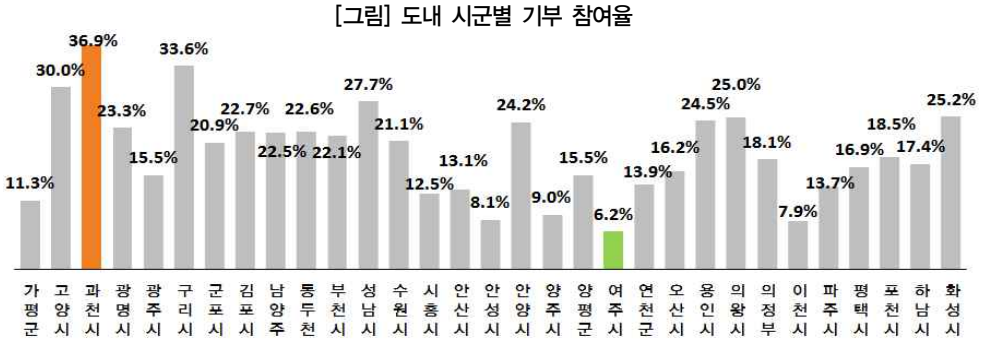
〈표〉 전국 시도별 기부 참여율 (15세 이상)

(단위: %)

	2011년	2013년	2015년		2011년	2013년	2015년
서울	37.3	36.5	33.0	강원	27.5	30.2	33.1
부산	39.6	44.8	32.2	충북	32.0	40.0	33.9
대구	33.1	35.6	24.7	충남	37.1	31.6	26.6
인천	34.1	36.5	33.9	전북	30.8	32.0	24.2
광주	38.8	39.0	30.2	전남	33.7	34.1	34.4
대전	39.2	47.1	30.3	경북	37.1	26.1	28.0
울산	36.6	31.8	29.5	경남	33.9	34.1	26.3
세종	–	–	29.6	제주	34.2	29.2	27.9
경기	36.8	30.3	27.7				

- 한편 경기복지재단(2016)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5년 한 해 동안 기부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응답자의 21.2%인 것으로 조사
  - 도내 시군별 기부 참여율은 과천 · 구리 · 고양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도내에서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여주 · 안성 · 이천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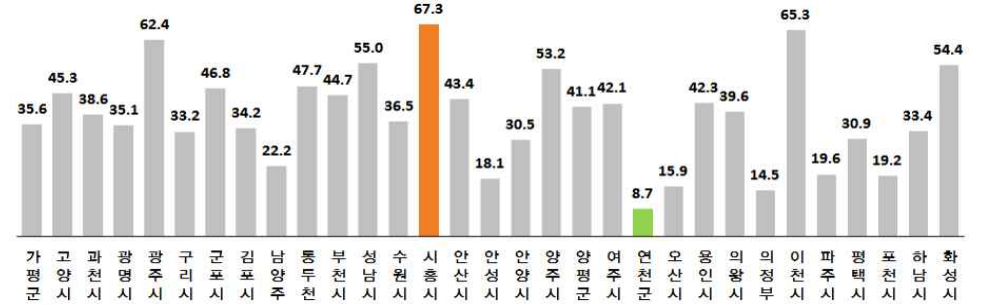
[그림] 도내 시군별 기부 참여율



- 경기도민이 '15년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은 평균 40.3만원이며,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시흥)과 가장 적은 지역(연천) 간에는 연간 59.7만원이 규모 차이 존재
  - 도내 시군 중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시흥(67.3만원), 이천(65.3만원), 광주(62.4만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연천(8.7만원), 의정부(14.5만원), 오산(15.9만원) 순임

[그림] 도내 시군별 평균 기부금액

(단위: 만원)



03 FACT CHECK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

- 지난 달 한국기부문화연구소가 모금 담당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40명(70%)이 '최순실 게이트가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응답
  - 개인 기부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90명(45%)이 '국민의 관심이 최순실 게이트로 쏠려서', 86명(43%)이 '최순실 게이트로 기부금 운용에 대한 불신이 커져서'라고 응답
  - 미르 ·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들이 그간 공익성을 쌓아온 '재단'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하고, 그와 무관한 기부단체들의 투명성과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혔다는 논리
- 민간의 자발적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한 기부는 시민사회 성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성장해왔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중요한 사회적 자본임
  - 그러나 우리사회는 기부를 사회적 책임, 연대 의식과 관련짓기보다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 편
  - 무엇보다도 끼리끼리의 연(緣)의 문화로 인해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이 기부를 더 어렵게 하는 요인
-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사회적 연대의식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와 참여 경험의 축적이 중요
  - 최근의 촛불집회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과 연대를 경험한 것과 같이 실생활 속에서 연대를 실천하고 기부로 이어지는 활동 경험을 축적하면 공동의 가치와 일체감 형성을 계기로 사회전체의 신뢰가 제고되는 기부의 선순환 가능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한국은 26.6%만이 "그렇다"고 응답(OECD 평균 36.0%)(대한상공회의소, 『한국의 사회적 자본 축적실태와 대응과제 연구』, 2016)

04 통계로 보는 복지

2015년 기부실태 통계*

기부참여율과 경제성장률 추이 / 연도별 기부금 신고 현황 (천억 원) / 가구의 월평균 기부지출액 (천원)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나눔실태 2015」

- 2015년 한 해 동안 기부에 참여한 15세 이상 인구는 29.8%로 나타났으며, 현금기부 참여 경험은 27.3%, 물품기부 참여 경험은 6.2%임*
  - 기부참여율은 지난 '11년 36%에서 지난 '13년 34.5%에 이어 '15년에도 감소하였고,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으며, 종별로는 현금보다 물품기부 참여 경험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 기부금액 규모는 '06년부터 '13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지난 '14년에 최초로 감소**
  - 2014년 기준 기부신고액은 총 11조 2,289억 원이며, 기부자별 금액비중은 개인과 법인이 '06년 각각 65.7%, 34.3%에서 '14년에는 각각 59.1%, 40.9%로 개인의 기부금 비중이 감소
- 가구의 월평균 기부금은 종교기부금 4만 3백원(88.7%), 사회단체 및 기타기관기부금 5천 2백원(11.3%)으로 구성***

* 「2015 사회조사」를 토대로 분석

** 「국세통계연보」 기부신고총액 기준으로 작성

*** 「2015 가계동향조사」